

#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내년 1월 발표... 공공의대, 2029년 도입 시동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다음 달 발표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될 전망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내년 2월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 담긴 '통합 돌봄 로드맵'이 발표된다.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 의료인력 공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또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최고 교육기관으로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한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정주 여건 지원으로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도 올해 4곳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진료량이 아닌 성과를 기반으로 한 가치 기반 지불체계도 강화한다. 지역·필수 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2027년에는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대상도 소아응급의학과와 신생아분과까지 넓힌다. 내년 1분기에는 '의료 혁신전략' 기본 방향 및 의제도 공개한다.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내년 2월에는 '통합 돌봄 로드맵'을 발표한다. 향후 5년간 목표, 추진 방향,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통합돌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실버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복지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발표 내년 2월 '통합 돌봄 로드맵'...청사진 제시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선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리고 일상생활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중인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연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원~2만원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도 올해 20만 1000명에서 내년 35만9000명으로 늘린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 감소 지역 중심 공공산후조리원도 설치한다. 지역 내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07만8000원을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고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2000개 제공하고 우선지정 일자리 지정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연금을 '심한 장애' 전체로 확대한다.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필요도가 높고 간병 지원이 필요한 환자의 간병비를 현재 100%에서 30% 내외로 줄여준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지방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 인력, 인프라 연구 개발(R&D) 등 패키지를 지원해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 최고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육성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 이정선 광주교육감, 교육정책으로 사법리스크 돌파하나 국가 교육비전 담은 '기본교육특별시 광주' 선언 "교원단체 비난 방어용 아냐, 순수한 교육적 관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했다.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 교육감이 이재명 정부와 코드를 맞춘 교육정책으로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교육부가 '국가 책임지는 기본교육'이라는 국가 교육비전을 발표했다"며 "기본교육특별시 광주 선언은 공공교육을 통해 교육구성원의 회복, 성장,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국민주권시대에 강조되는 기본사회 논의에 발맞춰 기본교육을 통해 시대의 요구와 방향을 담은 공공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안전망, 맞춤형성장, 행복공동체 등 3대 축을 통해 기본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광주의 기본교육은 4대 영역과 16대 중점사업에 반영할 계

획"이라며 "공교육으로 키워 낸 10년 만의 수능 만점의 성과를 기본교육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육감의 기본교육특별시 선언은 최근 사법리스크에 따른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정치적 공격을 교육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2018년 선거 낙선 후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났을 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조언을 듣고 교육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기본교육특별시 선언은 교원단체의 비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순수한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봐달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 시작 전 "최근의 일들로 심려까지 죄송하다"며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다름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뉴스1

## 전남교육청,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단체협약 타결

유급병가 30→60일로 두 배 확대... 장기재직·난임치료 시술휴가 신설

전남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 권의 신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체협은 본문 118개 조, 직종별 37개 조, 부칙 7개 조 등 총 159개 조로 이뤄졌으며,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 등 근로 환경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확대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반영한다. 장기 재직휴가를 신설해 10~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났으며, 임신 중 유산·사

산 휴가 3일도 신설했다. 난임치료 시술휴가는 시술 종류에 따라 신설해 저출산 시대의 난임 부부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미화원은 상시근로자로 전환하고, 특수교육실무사 등 근무일 수도 확대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노사의 약속"이라며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미래가 탄탄한 전남교육의 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비정규직노조와 연내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염선호 기자

## '12·29참사 규명자료 확보' 경찰, 항공사고조사위 압색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내부 보안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 본부는 16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김포·세종 등 항공사고조사위 사무실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참사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항공사고조사위 내부 규명 자

법령상 수사에 필요한 조사위 참고자료 임의제출 어려워 범죄 혐의 포착 아냐... 공항공사·항공사 등 44명 수사대상

료를 확보, 수사에 참고하고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 사고조사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위는 수사와 별개 규명활동을 하는 기관으로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내부 자료를 반출할 수 없어 영장을 발부·집행받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고조사위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참사 원인·과실 규명 과정에서 관제·조류 충돌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한 공항공사 직원과 방위각 시설공사 업체 관계자, 안전검사·허가 등을 담당한 전·현직 국토부 관계자 등 총 44명을 수사

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보강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비상 착륙하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충돌하고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오권철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